

4월 개학 앞둔 학교 '마스크 전쟁'

광주·전남교육청 110만장 확보... "예산 있어도 못 구해" 하소연
수급 대책 국민청원 등 방안 제시 속 마스크 착용 등교 안내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등 소형 마스크 확보도 과제

"예산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네요."
사상 초유의 초·중·고 '4월 개학'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학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개학하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기 힘들어지는 데다 학교 자체 비축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 교육 당국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실과 강당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이지만 25일 현재 교육청이 확보한 마스크 분량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42만여장과 65만여장으로 110만여장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각 2일·3일 분량(하루 1매) 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4월6일 개학에 대비해 마스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품귀현상으로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보건교사들도 "대부분의 학교가 확보한 마스크는 긴급상황 때 사용하는 300여장(보건용 마스크)뿐"이라며 "2주 전에 의류상사 등에 1000장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청원과 구매방안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마스크 일괄공급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안된 상태다.
마스크 일괄공급 제안은 중·고교 학생들이 약국 등이 문을 열기 전에 등교하고, 학교 후에도 방과후 활동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현실에 따른 것이다. 현재 2010년 이후 출생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부모가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이전 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과 중·고교생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스쿨뱅킹'(각종 비용을 학교 계좌로 이체)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

됐다. 마스크 구입자의 신분 확인이 간편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등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소형 마스크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마스크 공급업체들이 성인용 마스크 제작과 공급에 주력하면서 소형 마스크가 크게 부족한 탓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이 투트랙으로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매일 모든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건 어려운 만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 취약계층 학생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집중 관리

영업제한 명령이행 여부 확인 등
광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한다.
점검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집합명령에 따라 추진됐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광주시,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점검대상은 총 51곳으로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면적이 300㎡ 이상인 유흥주점과 젊은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가급적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전담 직원 배치 여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코로나19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집중 관리를 위해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자치구 주도로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밤에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밤 구시청사거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지도를 하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인대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북구청 직원들이 오차동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계도장을 붙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독도 영토 왜곡' 일본 교과서 시정 촉구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2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일본에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성명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역사·공민·지리 3개 과목 17종 교과서 중 14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것은 도를 넘은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독도는 역사·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영토"라며 "독도 침탈은 그릇된 역사인식과 영토관이 반영된 탐욕의 결과로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박사방' 조주빈에 사기 당한 윤장현 전 시장

"손석희 만나 방송 출연 돕겠다"...활동비 요구에 돈 건넨 듯

윤측 "조주빈 연루 상상도 못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윤 전 시장을 언급해 윤 전 시장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며 관심이 집중됐다.
조씨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용 기자님들한테 사죄한다"고 말했다.
일단, 경찰은 조씨가 언급한 윤 전 시장 등과 관련, "이들이 성 착취물을 보거나 (n번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 다 사기피해자로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사건 피해자로 조사중이며 수사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씨와 실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단계에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주빈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 측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윤 전 시장은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최 실장'이라는 인물과 전화 통화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으로 최 실장은 서울의 모 기관에 근무한다며 접근,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인 줄 알고 사기범 자녀들을 도와주셨는데 자녀 관련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고겠다"고 접근했다.
최 실장은 이 과정에서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때냐"고 윤 전 시장에게 제안, 방송국을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을 통해 소개받은 다른 남성과 스튜디오로 이어지는 장소에서 손 사장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이후 "기회가 되면 조만간 인터뷰 방송을 잡자"며 했지만 출연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중간에 활동비를 요구하는 최 실장에게 방송국에 갈 때 동행했던 남성을 통해 돈을 건넸으며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기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조주빈에게 사기범에게 사기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최근 제주 아라동 제주선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차량 3대 절도 중학생 풀려난지 이틀만에 또 차량 훔쳐

차량 3대를 잇따라 훔쳐 몰고 다니다 경찰에 검거된 10대 중학생이 풀려난 지 이틀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화순경찰은 25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중학교 3학년 A(14)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A군은 지난 24일 밤 11시20분께 화순군 이서면 본인의 집 앞에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이 걸려있는 1t타차를 훔쳐 타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

잡혔다.
A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40분 가량을 달아나다 막대한 경찰차량을 들이받는가 하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군은 하루 전, 화순과 광주 북구·동구를 돌며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 3대를 훔쳐 타고 다닌 혐의로 동부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군 부모는 경찰서를 찾아 선처를 호소했지만 A군은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제 독감 접종' 의혹 사실로...부인했던 목포시의원들 '눈총'

○... '황제 독감 접종' 의혹을 부인했던 목포시의원들이 의회로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에게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눈총.
○... 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목포시의원 4명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의회에서 보건소 공무원들 2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 경찰은 이들에게 독감 접종을 해준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